

여야 기초연금 '복지 후퇴' 싸고 치열한 공방

국정감사 첫 날

“차기 전투기 사업 표류·전작권 전환 재연기 납득 안 돼” 역사교과서 좌우 대리전... 일본 재무장 소극대응 질타도

국회는 14일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628개 기관을 감사하게 된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정부 일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처음으로 서

울, 과천, 세종 정부청사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다. 여야는 첫날 국감부터 차기 전투기 사업,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기초연금 수정안,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방침에 분명히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다”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 되도록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는) 주변국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가진 나라가 많다.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길 의원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가 아니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가 정부 입장이 돼야 한다”면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직도 (장관이) 실감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방위는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 표류와 전작권전환재연기 전환 재연기 배정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8조3000억원으로 (스텔스 기능이 완비된) 전투기 60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금까지 엉터리, 졸속으로 한 게 아니라면 이번엔 선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방위사업추진위의 역할로서 위원들 의견을 전부 받아보고 (기중 선정용) 다시 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했다”며 사업 연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전작권을 가졌을 때와 안 가졌을 때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이 다를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올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면서 “국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 불가피하게 이 시기에 전작권 전환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일부 역사 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이에 맞불을 놓는 좌·우파 진영의 대리전이 벌어졌다.

또 여야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층에게만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관련해 ‘공약 파기’, ‘복지 후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는 전일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사례를 놓고 야당 측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감사장에 의원들 앞에 국감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인구 우리가 많으니 국회의원 의석 내놔라” 총청권 여론몰이 호남은 수수방관

정치적 소외 심화 우려

총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넘어선 이후 총청 국회의원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총청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호남의 정치적 소외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북지사 출신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대선이 열리는 4~5년 이후에는 총청 인구가 호남보다 31만명 많아진다”면서 “그럼에도 의석수는 총청(25석)이 호남(30석)보다 5석이나 적다”고 발언을 열었다. 이어 “이는 표(票) 등가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총청·호남권 선거구 조정 문제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지역 인구는 지난 5월 말 처음 역전된 이래 9월말 현재 총청권 526만3233명 대 호남권 525만3299명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유수택 최고위원은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전북·전남·광주는 4년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구 조정시)이 군(郡)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해서 인구가동이 심하고, 고령자가 많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폐쇄될 학교가 수백 곳”이라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호남권은 전국 인구비례로 따지면 경상도 다음이지만 먹고 살기가 곤란하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다들 데 가서 벌어먹고 살자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런 현상”이라면서 “선거구 개편, 대의원 정수 조정 등 그런 문제는 호남의 어려움, 정치적 상황도 심층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의 방언에도 불구하고, 총청권 선거구 증설 논의는 확산할 조짐이다. 이날 정 최고위원의 발언 전인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인 국회 박병석 부의장과 변재일 총북도당위원장, 양승조 최고위원, 박수현 총남도당위원장,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등은 지난달 30일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청지역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당장 국회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또 지난 1일 열린 24회 총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영호철 대전시장,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총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고 총청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힘을 모으자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사)역동적인 대전포럼이 주관하는 ‘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학술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후 대전에서 열리는 등 총청권의 여론몰이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경제적 피해에 이어 정치적 역할까지 축소된다면 호남은 더욱 변방으로 물리게 될 것”이라며 “호남 정치권이 당장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기호 의원 “선거법 누락선고... 대법원이 법규정 위반”

“여당의원에 관대·야당 의원엔 가혹한 판결도 문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이 3개월 선고시한을 무시하고 10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과 공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는 2심 판결선고 후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16명으로 이중 확정판결을 받은 2명과 2심에 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하면 13명이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면서 “특히 10명에 대해서는 3개월 선고시한이 무시된 채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3개월 판결시한을 지켰더라면 이번 10월 재보선 지역은 몇 곳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대법원 누락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인 재보선의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판결 관련 여당 의원에게는 관대한 판결이, 야당 의원에게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 윤모 의원과 박모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으나 2심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반면 민주당 최모 의원과 이모 의원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험들가족 모두 붙어라

가족이 함께 들면 보험료 할인

가족할인 대축제 (가족 동시가입 할인제도 시행)

가족이 뭉쳐서 보험료 할인받아 웃고! (10.1~)

- 가족인정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 2인 동일날짜 계약시 주보험 영업보험료의 1%, 3인 이상 동일날짜 계약시 주보험 영업보험료의 2% 할인 (2회 보험료 납입부터 할인 적용)
- 대상 상품: 삼성생명 암보험, 자녀보험, 아이사랑보험

특별 이벤트

가족에 힘이 될 풍성한 선물에 웃고! (이벤트 기간: 10.1~10.31)

- 컨설턴트를 만나 동의를 작성해주신 분들께 선물 증정·피지컬 1만원 할인권 (소진시까지)
- 컨설턴트에게 보장/연금분석을 받거나 동의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한 가족여행 상품 증정 (1등 고급텐트(15명)/2등 여행용 가방(1000명)/3등 고급담요(1000명) / 참가자 가족여행(소진시까지)

*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기정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SAMSUNG

빛日만평

- 김중두

3주동안?! 글썽 울시다

/연합뉴스